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설문조사

학평기 인구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미래 사회를 위한 고등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마무리되고, 2주기 평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대학평가를 경험한 대학교수님들의 의견을 통해 대학평가가 대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분정도 시간 내주셔서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학교육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소속교 설립유형은

- ① 국·공립 383(75%) ② 사립 128(25%)

2. 귀하의 소속교 대학유형

- ① 일반대 458(89.6%) ② 산업대 ③ 전문대 36(7%) ④ 기타 17(3.3%)

3. 귀하의 소속교 지역

- ① 서울 63(12.3%) ② 경기도 60(11.7%) ③ 강원도 8(1.6%)
 ④ 충청도 169(33.1%) ⑤ 전라도 79(15.5%) ⑥ 경상도 122(23.9%) ⑦ 제주도 10(2%)

4. 보직 여부

- ① 보직 교수 116(23.1%) ② 비보직 교수 387(76.9%)

5.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2(0.4%)
 ② 그렇다 47(9.2%)
 ③ 보통이다 73(14.3%)
 ④ 아니다 147(28.8%)
 ⑤ 전혀 아니다 236(46.2%)
 ⑥ 모르겠다 6(1.2%)

※ 5번 문항에서 ①, ②을 답했으면 6번 질문으로, ④, ⑤를 답했으면 7번 질문으로 이동해주세요.

6. [5번 질문에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응답자] 대학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강의와 연구 여건 개선 18(30%)
 - ②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19(31.7%)
 - ③ 장학금 확대 등 학생 생활 지원 확대 26(43.3%)
 - ④ 대학구조개혁평가 대비를 위한 대학 당국의 지원 확대 17(28.3%)
 - ⑤ 학과 조정과 정원감축으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대학교육 전환 27(45%)
- 기타(안일한 대학사회에 경종, 사학재단의 공공성 인식개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 교육행정의 체계성 향상)

7. [5번 질문에 “ ④ 아니다”, “ ⑤ 전혀 아니다” 응답자] 대학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대학구조개혁 평가 준비로 강의나 연구를 위한 시간 부족 111(28.1%)
 - ②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대학이 교육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변질 264(66.8%)
 - ③ 대학교개혁 평가로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 형성 287(72.7%)
 - ④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대학 교직원들의 인식 부족 29(7.3%)
 - ⑤ 수업관리 학생평가 등의 평가 지표로 학문의 자율성 훼손 209(52.9%)
 - ⑥ 기타
-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사회적 인식 저하로 대학서열 가중,
 - 재정지원금 대비 가성비 극히 저조,
 - 평가지표로 결국 교수들의 교권을 통제하는 도구로 변질, 특히 취업률은 대학을 취업 기관으로 전락시킴, 설립재단이 실제 투자유도 보다는 교직원들의 통제 및 급여 삭감 등을 위한 정의로운 이유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발판 제공,
 - 대학의 관심사가 교육과 연구에서 생존을 위한 경비절감으로 옮겨짐, 형식과 양적 평가, 개별 특수성 고려안된 동일한 잣대 등으로 결코 변화를 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적향상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평가대비시간으로 허비하고 있음,
 - 평가와 대학교육의 질과의 연관성 미흡, 최고의 전문가인 대학교수의 전문성과 자율성 상실,
 - 대학평가가 대학적폐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함,
 - 사학비리를 부채질,
 - 외형적인 과도한 형식주의로 교육의 본질과 내실을 저해함,
 - 대학은 전문학력전수기관, 우리나라대학교는 전문교양이 아닌 일반교육을 약50%, 대학은 학사증교부처,
 -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기능제고필요,

- 대학구조조정을 100번하더라도, 대졸취업엔 영장이 미미,
- 대학이 취업 학원으로 변질함. 왜 대학이 취업률까지 책임져야 하나.
-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로 전임교원노동강도 강화, 강사 대량해고로 교육의 질 하락과 교육의 다양성 및 학생 수업선택권 훼손, 대학의 특수성이나 특성화가 아닌 줄세우기식의 평가

8. 교육부는 2018년 3월 시행되는 2주기 대학평가에서는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은 2단계에서 평가하여 X,Y,Z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구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2주기 대학평가가 시행되면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3(0.6%)
- ② 그렇다 43(8.5%)
- ③ 보통이다 113(22.3%)
- ④ 아니다 137(27%)
- ⑤ 전혀 아니다 188(37.1%)
- ⑥ 모르겠다 23(4.5%)

10.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할 대학 교육 문제 중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대학서열화 완화 183(35.9%)
- ② 사학 부패, 비리 해결 272(53.3%)
- ③ 비수도권 대학 존립위기 해결 187(36.7%)
- 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 교육 변화 97(19%)
- ⑤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회복 348(68.2%)
- ⑥ 세계적으로 학문 경쟁력을 갖춘 대학 육성 73(14.3%)

9. 8번 문항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 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 고등교육에 대한 비전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과도한 사립대 및 수도권 집중 구조 타파에 별 효과 없음

-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지표에 맞추려고 교직원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교육의 질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음. 학생들이 우선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직원인 수업과 학생 상담 등 학생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변화에 적응하도록 추동하니까
-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발전 지원책이 아니라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논거 확보의 가시적 목표가 우선되는 것으로 인식됨. 대학이 자율적으로 생존 경쟁을 하도록 허용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재정교부금의 지급이 보다 효과적임.
-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함으로써 평가 기준에 맞추고자 모든 대학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대부분의 평가는 행위의 증거로 평가되므로 증거를 만들어내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대학 역량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음. 이는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본연의 업무인 강의와 연구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임
- 일단 대학교육의 형태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는 것이 대학교육을 획일화하고 오히려 이에 맞추다 보니 비교육적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 질적으로 낮은 대학을 연명시켜서 죽이느니 빠르게 과감하게 하위권을 정리해야 학생들이 희생하지 않고 모두가 산다.
- 급변하는 사회를 대학가에서만 외면하여 구태연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특히 국립대학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함
- 대학의 자율성 훼손 대학의 평준화로인한 특성및개성 죽이기(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획일화 심화)
- 근본적인 목적은 대학 개수를 줄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 개선에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대문임
- 평가 목적(대학 정원 감축) 자체의 부적절성
- 구조개혁평가는 정원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교육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학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학은 구조개혁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상은 구조개혁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 등 행정적 보고서를 누가 잘쓰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점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 대학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형식에 맞추려고 비교육적이고 비본질적인 일들이 많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학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 없이 직업 교육 기관으로 너무 점철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 가 없습니다. 대학교육도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진정한 지식의 생산이라는 측면을 생각하고 학문적 후속성을 고려해본다면 대학교육의 방법 등(즉, 2015개정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학생 참여형 교육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고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여전히 문서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대학은 재정압박, 학생 부족, 교수는 연구 등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
- 통제위주 평가로 대학의 자율성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 평가로 인해 어떤 영역에서는 질 개선이 당연히 되겠지만 교수들의 수업준비 등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는 시간 부족과 피곤으로 오히려 질이 떨어질 수 있음
- 개혁대상이 되어야 할 교육부와 유착관계가 있는 교육정상배와 결탁해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대학구조개혁평가란 처음부터 불신의 대상이다.
- 평가기준에 형식적으로 맞춤. 실제 개선 미흡
- 대학과 불질과 대학 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검토와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여건(교원수 등), 성과(취업률, 논문수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면 평가지표 중심의 대학이 되고 말 뿐, 학문이나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논의가 무의미하다.
- 채찍 중심의 구조적(폐쇄적)이고 타율적인 평가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하는 개혁이나 현실극복을 하기 어렵다고 봄
- 평가의 목적 교육의 질 개선에 두지않고 제재를 가하는데 있는 한, 일시적인 표면적인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대학이 구조개혁평가의 틀에 맞추어 짐으로써 대학의 획일화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대학의 이념과 자율성이 훼손된다.
- 순수과학이나 인문학은 다 고사된다.
- 대학 재정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장학금 지표의 경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좋지만, 전체 학생이나 학교를 위한 재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교수의 임금수준도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다른 교육부분의 투자가 줄어들수 밖에 없다. 대학의 사정에 따라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표 관리의 차원에서 힘들게 되어 있다.
- 평가준비로 인해 대학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할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평가준비로 대학이 해야할 사명이 유명무실해질 지경임

- 국가와 시민사회 차원의 대학 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와 협의 부족, 구조 조정 대상 대학의 교직원 고용에 대한 대책 미비 등.
- 일반재정지원이 병행되기 때문
- 일괄정원감축이 아니라 문제 대학만 정원감축하기 때문에
- 대학에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밀어붙이거나 비현실적인 평가지표를 반영하는 등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평가는 내실있는 대학구조조정보다는 평가에 따른 이익/불이익이 우선시 되어 상황을 넘기려는 경향이 강함.
- 평가로 인해 대학의 본질에 충실하기 보다는 평가 지표에 따른 실적올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함
- 대학 교육의 본질과 기능을 살려주고 강화하는 구조 조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 거대 공용 대학의 자율적인 변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 대학 개선의 노력을 대학의 실정에 맞게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지표에 맞게 맞추다보면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임. 다시말하면 평가를 위한 평가준비에 그치지 않는다고 봄
- 교육부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은 교육부의 대학 통제나 교육부 관료 혹은 전임 관료들의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짐. 현재 교육부 퇴직 관료 중에는 여러 대학에서 총장 혹은 교수로 재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집행은 교육부가 하더라도 의사결정은 대학 구성원과 관련 당사자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마다 지역과 인력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의 특성이 차이가 있다. 이런 통제하에서는 자율성이 훼손되어서 평가에 치중한 한 가지 유형의 대학으로 전국이 뒤덮힐 것이다.
- 학문의 연구에는 순수성과 응용성의 두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모두 자율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특수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몇 가지 지표로써 평가한 후 구조개혁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교육의 질은 평가로 측정하기 어려움
- 관선이사 파견된 대학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부 주도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한다는 것은 년센스다.
- 2주기 계획이 1주기와 실제로 변한게 없다. 자율개선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모집정원 축소하면(교육부가 의도하는 구조조정을 스스로 수행하면) 평가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으면(교육부의 의지에 반하면) 평가하여 다시 1주기와 같은 방식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1주기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임.

-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미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니
- 전국의 대학들은 그 평가를 준비하느라 교육에 매진할 겨를이 없다.
- 프라임사업, LINC사업, 대학특성화사업, 혁신사업, ACE사업, Core사업 등 수없이 많은 재정지원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대학들은 그 돈을 따기 위해 많은 교수들을 보고서 작업으로 내몰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 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 그러니 자신의 연구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나면 학생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남지 않는다.
- 국가가 설립한 대학은 그런 평가를 하지말고 돈을 지원하고, 반면에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은 엄벌에 처하면 된다. 또한 국립의 2.5배 정도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사립대학은 선별해서 지원해주고, 이 또한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을 엄벌하면 된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업비로 지급받은 돈으로 사학연금을 납부해서 문제가 있었던 대학에 지금도 계속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의 뒷모습이다.
- 지금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줄을 서서 입학하는 수도권 대학이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다. 대학원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학부 입학생의 성적이 우수한 대학의 교수는 강의와 자신의 연구만 하면 된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소재한 대학의 교수는 강의, 과제물과 성적 처리, 학생 생활 지도와 상담, 취업지도까지 해야한다.
- 그 대학들을 모두 한 틀에 넣고 평가를 하기때문에 결과가 뻔하다. 그런데 사립대학들 중에 각종 정량적인 지표는 나뻐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좋은 대학이 많다. 이것은 결국 보고서와 서류 작업의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대도시에서 소재한 대학이 좋을 수 밖에 없는 지표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한다. 거기다가 이번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지방의 소규모 국립대학이 유리한 항목들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더구나 이번 평가는 권역별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권역내 대도시에서 있는 대학들은 평가결과가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
- 의미있는 평가가 되려면,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서 봐야 할텐데 산출 결과만 보는
- 평가가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라 할 수 있는가
- 또한 평가 때 마다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느라고 정책연구, 공청회, 설명회를 반복해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 결론적으로 국가가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대학, 교수, 학생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지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들고 그 들의 시간을 뺏는 것은 교육의 질을 악화시킬 뿐이다.

-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 기재부 등의 관료들은 매국노이다)"
-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인지하도록 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율성을 주고 소비자(입학지원자 및 재학생, 대학원생 등)의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평가의 문제가 '평가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인가'의 문제인데, 결국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감소로 인한 대학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듦.
- 평가 목적이 대학의 부실을 가려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 단지 등급을 매길 뿐임
- 지방 대학은 현재 지표로 볼 때 매우 불리한 상황. 현재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한번도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들. 현재 지표는 질 개선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신자본주의 논리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학들만 살아남는 구조라고 보여짐
- 단기적인 성과에 목표를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이다.
- 평가지표로 대학을 서열화 시키고 고사시키는 정책으로는 대학의 문제점을 개선할수 없음
- 17년 교수로 살면서, 진정한 학문과 교육이 대학교육에서 대학원교육까지 점점 흐려지고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평가를 위한 준비와 서열화를 위한 평가 도구로서의 대학교육이라는 생각에 "가르치는 행복감"마저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 평가지표에만 의존한 획일화된 대학교육의 질이 향상될까? 하는 의문
- 설립재단이 실제 투자유도 보다는 교직원들의 통재 및 급여 삭감 등을 위한 정의로운 이유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발판으로 저임금의 기본체제화 구축되는 평가로 사료됨
-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로 전환, 평가의 공정성 문제
-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한 과감하고 충격적인 통합, 개혁.
- 한국의 사립대학은 정당한 평가방식에 따라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 평가의 목적 자체가 교육의 질 개선이 아닌 대학 정원 감소에 있고, 일부 한계대학 퇴출에 의한 교육 질 개선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는 거의 영향이 없음
- 키워야할 대학, 퇴출되어야할 대학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 교육부가 욱먹기 싫어서 새

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식행위이기 때문

-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연구 없이 행정과 예산을 무기 삼아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 연구 분위기를 통제하고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 외부의 압력과 힘으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늘 껌데기와 제도만 바꾸는 식으로 대학이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 일만 늘어나고, 그 때문에 대학의 본업에 덜 충실하게 될 뿐, 교육의 정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 대학의 질 개선은 교육과 연구를 기초로 이를 지원할 재정투입이 절대적인데 현재의 구조개혁은 내적인 충실성 지표보다 외적 계량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평가 지표가 실제로는 교육의 질 개선과 별 상관 없기 때문
-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평가가 아니니까...
- 정부가 지나치게 주도권을 쥐고 과도하게 대학 생태계를 흔드는 것은 마땅히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대학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기제에 의해 대학구조조정이 어떻게든 될 것이니 정부가 손을 뗐을 경우의 부작용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모집하러 대학교수들이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평가도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한 가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학의 학생 취업을 등과 저번 평가와 유사한 항목이 포함된다거나, 법인 운영의 합리성과 같이 대학 구성원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잘못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 대학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교육의 질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 평가 문화가 잘 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도구로 암을 진단하려는 것과 같은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구조개혁방향이 정원축소에 집중되어 있을뿐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 없기 때문이며, 각 대학과 교수들 역시 구조개혁과 교육은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내용이 중요하다. 형식보다는.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철학의 바탕이 무엇인가가 명료하지 않다. 이게 뭔지 명확히 모르겠으나 형식만 바뀌었지 기존의 평가와 뭐가 다른지 하는 느낌.
- 대학의 획일화 초래
- 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교육부는 구조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 현재 구조개혁은 교육부 주도 이므로 도움이 되지 않음
-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대학은 평가점수 향상에만 열중하고

있다.

- 전문성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은 교육부 중심 획일화가 아닌 대학자체내에서 계획하여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해 교육부의 과도한 개입은 교육 시장경제를 균형잡게 하는것이 아니라 교육부 고위 담당자들의 사적인 의도로 서열을 만드는 적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사학 적폐 행위를 감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시장경제가 왜곡되지 않는 부분에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
- 대학 교육의 본원적 목적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상명하복식 일방적, 위헌적 행정 집행에 불과함
-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실질적 대학의 질개선이 아니라 지표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교수들에게는 입학, 중도탈락률, 취업률, 논문실적등으로 압박이 가해짐. 단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낮은 연봉의 외국인 교수들을 채용한다거나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강사를 활용하기 보다 전임교원의 150%이상의 초과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함.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휴학을 못하도록 학생을 상담하며 설득해야 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음. 평가라는 방식이 갖는 고질적인 폐해가 뒤따름
-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대학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만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섭과 개입이 통제만능과 현장왜곡을 야기한다.
- 1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서 대학이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으니 이제는 각자 특성따른 특성화를 해야 할 시기에 또 다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줄을 세우는 것은 대학의 획일화만 만드는 일이기에 이제 기본을 갖추고 난 대학들이 서로 자율경쟁하여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교수들이 평가준비에 매달리면서 교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
- 구정권에서 조장한 교육현장의 황폐화에 편승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 설립인가와 목적이 중요하지 관련당사자인 교수와 직원 학생과의 교감없이 대학자체의 규모나 재정능력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몫만 다하길 바라고 있다. 법적 제도적 창구는 단지 소송뿐이다.
- 정부 주도의 한계가 명확하다.
- 서류 싸움...지표싸움이죠....숫자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수업의질?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지요...
- "기본적으로 각 대학의 이념적 철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는 대학을 획일화하고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평가를 하면 대학 당국이 평가지표에 맞추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향상되는지 의문입니다.
- 2주기 평가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시키면서 각 대학이 특성을 갖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 교육부의 평가는 교육부의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립대학으로 하여금 그 돈에 연연하게 만들으로써 교수의 평가 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 지표위주 평가의 한계
- 대학교육의 질 개선은 교수에게 수업권한을 많이 부여할 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함. 구조개혁으로 수업권한이 훼손되고 문서 양상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함.
- 대학마다 특성이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으로 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많다.
-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대학정신을 구현하는지,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실현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기에
- 현재를 평가해서 교육부가 질이 나쁜 대학을 숙아내기 위해 한다는 것이지, 현재의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듯.
-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을 재단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도하더라도 성공할 수는 없다. 역사상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 지표 개선되었으나 서열식 평가방법을 벗어나지 못함
- -대학구조개혁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학생 수 감소가 원인이지만 구조개혁 이후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은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 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평가 지표 개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대학의 운영가치에서 교육부가 아니라 학생이어야 하기에,
- 구조개혁의 연속성 필요
- 평가지표에 맞추기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불만 과 시간낭비
- 1주기와 대동소이하다.
- 학문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왜곡되기 때문-취업률이나 기타의 문제로 인해.
- 대학은 양이 아니고 이는 자율성이 중요. 이를 침해하는 행위.

- 인위적 구조개혁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평가가 갖는 순기능이 반드시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획일적 기준에 의한 평가와 그로 인한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활동이 지나치게 요구되어 대학이 교육이 아닌 평가에 쏟아 붓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음
- 교육부의 천편일률적 기준으로 대학을 몰아가면서 개성과 창의성, 자율성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
- 대학 자율성 침해에 따른 학문 자율성 훼손
-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의 질과 거리가 상당히 멀다. 단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정부가 강제적 대학폐교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대학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질은 바닥을 치고 있고, 폐교위기의 대학구성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 대학교육의 질은 교육부의 쇄신(사학의 관리감독철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 부실대학은 과감히 정리해야한다. 교육부가 눈치보고, 사학재단에 끌려다니는 동안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며, 국민은 불법과 편법이 시정되지 않는 사회의 공범자이자 피해자가 된다.
-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라서 실제 질이 향상되었는지 알기 어려움. 어떻게 해서든 지표만 맞추면 되는데 실제 보면 개선된 바가 별로 없음
- 대학당국의 부담이 늘겠지만 최소한의 착무수행을 독려하는 기회가 될 것임
- 대학의 자율성 침해
- 대학을 지나치게 경쟁위주로 평가하고 고유기능인 교육의 역할에 대한 순기능을 무시하고 있음.
- 평가방식이 교육의 질무관하거나 역해하기 때문에
- 정원감축을 위한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대학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교육을 상실함.
- 대학교육은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교육부는 자신이 만든 잣대만이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래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학문 연구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대학이 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또한,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교수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평가의 교육적 기능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 교육부의 갑질행정에 대학이 발맞춰야 하기 때문. 특히 박근혜 정부의 오류투성이 평

- 가지표를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
- 여전히 대학들은 고유의 설립 목적은 고려하지 못한 채 교육부의 눈치만 보게 될 것 입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 안도하게 될 것이며, 한계 대학으로 분류되면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당장부터 학교가 휘청거리고 면학 분위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대학교육의 질은 교수자의 동기와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정부의 개입과 같은 외적 평가나 보상에 영향받지 않음. 외적 평가는 오로지 평가자대에 맞는 외적 변화, 즉 전 시행정 같은 것만 초래할 뿐임.
- 대학은 이미 전문가인 교수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비자율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있음.
- 사립대학의 운영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됨. 학령인구가 감소한 만큼 줄어든 학생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학간 구조조정이 있을 것임. 지금 진행되는 구조 조정의 방향인 인위적인 지역 기반 구조조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함.
- 모든 대학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평가자대를 통해 등급을 매기고, 정원감축을 목표로 돌진하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어떻게 대학교육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임.
-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가 적절하지 않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를 들어 취업률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졸업후에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겠다는데 알바라도 하라고 원하는 교육이 과연 교육적인지 반문하고 싶다.
- 대학을 점수위주로만 서열화하여 거꾸로 점수에 맞춘 대학을 지향하게 만들.
- 자율개선대학들의 파행으로 선의 피해자 다수 양산, 공정성 훼손으로 정당성 상실
- 철학과 비전이 없이 대학 줄세우기로 정원감축이 목표인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을 황폐화시키고 대학구조를 개악을 할 뿐이다.
- 1)1주기에 이어 자율적 구조개혁의 동력이 재정지원사업의 연계일 때,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 , 2)상호 특성화, 기능배분 등을 전제한 통폐합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이 전국단위 형평성, 균형성에 입각해 모호함.
- 평가 지표가 대학교육의 개선과 상관없는 지표들로 되어있으므로 깊은 연구후에 평가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20대 80의 국립대/ 사립대 비율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방안이 없이 지방대학의 정원감축만을 강요하는 박근혜정권의 적폐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

- 대학구조조정은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맡기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다.
- 정량지표위주 평가 무의미
- "어차피 현재 교육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상황에 경쟁력 없는 대학은 도퇴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평가자대는 실질적 교육의 내용보다 평가 기준만 맞추면 면피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잘라 내리는 방법보다 장려 사업을 획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문대학평가인증으로 열학한 대학현실에서 교육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중, 3중의 평가가 동시에 운영되다보니 교수자의 역할이 변질되어 진정한 수업이 아니라 평가기준에 맞는 실적 만들기로 행해지고 있어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은 것 같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졌습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이것을 수행하는 교수들의 올바른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게, 평가를 위한 대학이 아니라 대학이 운영하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대학평가는 대학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여건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평가하는것으로 방향을 잡아야함, 대학기관인증평가가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때문에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특별히 대학교육의질이 개선된다고는 볼수없음. 대학기관인증평가는 줄세우기질 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않음
- 좋은 평가를 받기위한 대학의 노력이 결국 교육의 질 개선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함
- 교육의질과 평가요소간의 인과관계의 적절성에대한 회의
- 대학의 창의성이 전혀 반영이 않됨
-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학들이 온갖비리를 자행하는 한편으로 대학이 교육기관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으로 타락함
- 평가에 앞서 대학을 민주화해야 평가도 신뢰할 수 있음
- "사립대학들이 평가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풀려져도 엄격하게 심사하기는 커녕 대학평가원이 목인. 방조. 심지어 비호하는 모양세를 갖고 있음.
- 평가원의 각 대학 지표가 사실상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의 기본인데 부실 지표
- 신고를 해도 오히려 더 교묘하게 지표를 숨기고 왜곡하고 있음."
-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 침해 또한 평가준비에 학생교육 소홀하게 됨

- 거짓 평가준비 또는 실질적 변화는 매우 미흡하고 교육부의 철저한 시너로 전락.
- 사학운영기관에 대한 제제가 없기때문
- 구조개혁 평가 지침이 온갖 비교육적 적폐의 원인을 제공. 교권침해, 취업률 평가, 기부금 등.. 대학은 취업기관이 아니다. 취업은 국가, 기업이 해야할 일
- 대학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순위와 등급을 매겨 단순히 탈락에만 초점이 있음
-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음
- 대학통제수단으로 활용하기때문
- 무능한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조정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도록 해도 충분히 능력 안되는 대학들은 정리가 될 것이다.
- "1. 부실 및 비리 대학은 교육부가 직접 감사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음.
- 2. 지방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축소를 추진해야하며 정원을 축소한 수도권 대학에 대하여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함(평가제도가 아닌)
- 3. 충원율이 높은 지방대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원리와 보완하여 자율적인 정원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교육부부터 개조하여야 한다.
- 대학구조조정자체가 의미없으며, 학생들의 전문정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외국대학 참고
- 첫째, 현재 독단과 전횡구조의 사학 재단과 총장 중심이던 평가 주체 하에서 교육과 대학, 학문의 자율성의 완전 통제되고 있으므로 둘째, 전임교원의 확충 없는 시간강사 계속되는 감소와 강의와 연구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산학협력 교수등의 증가, 취업률 중심의 강의 요구, 형식적 획일적 평가 지표 등으로 교육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마디로 최악의 개막 조치임.
- 평가항목 자체가 취업률 등 교육의 질 개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 따라서 구조개혁평가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은 전혀 상관 관계가 없음. 대학 길들이기를 위한 평가, 평가를 위한 평가일 뿐. 지금 전국의 모든 대학이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 사기치고 있는 상태. 부패 비리 족벌 대학 패널리만(입학생 정원 감소 등) 쥐도 학생 수급 문제는 다 해결됨.
- 질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봄.

- "1. 구조개혁평가 준비로 교직원의 피로도 극심
- 2. 대학서열화를 통한 정원감축으로 경쟁력 강화보다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
- "대학을 취업이나 시장논리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구조개혁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비정규직화와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축을 대학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 구조개혁에 의해 취업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탁상공론이다."
- I think that something more drastic needs to change in the culture before the education system can change. How can you expect students who go from high school where everything is about one test that determines their future to take college seriously and learn something not just get good grades. Reform needs to start before students even get to university. I really hope whoever reads this can understand what I am talking about.
- 학령기 인구 감소를 대비한 대학교육 질의 제고와 대학의 기존 체질 개선
- 획일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각 대학의 자율성 및 학문을 사장시키는 것이 될 것 같음.
- 단기적으로 평가지표 향상에만 신경을 쓰는 결과 초래
- 지방대학 입시 불이익
- 재단과 교육부관료들의 밀월관계유지(퇴임관료들을 위한 자리만들기 위한 대학지배력 확보)로 인한 대학내 학문자유성 및 민주화 저해요인
- 공정타당하고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교육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것이다. 그러나 평가를 위한 평가, 줄 세우기를 통한 구조조정에는 의미가 없다고 봄
- 대학이 경쟁력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됨으로
- 좋지 않은 학령인구 감소대책 일 뿐, 애초에 질 개선을 하자고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님.
- 대학 자율 필요
- 구조조정으로 인학학부제 도입과 그에따른 전공교육부실,전공간 갈등심화
- 구조개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한 편 타율에 의해 학교의 존망을 바라봐야 하는 피 평가기관에 놓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 2주기평가는 1주기평가의 연속선 상에 있어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실제적인 교육의 질보다 보고서를 잘쓰는 인프라를 갖춘 대학에 유리한 평가 구조, 평가준비로 인한 강의 및 연구 시간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 각 대학의 특성, 정체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화된 정량지표에 맞추는 방식으로는 교

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평가지표가 되면 강좌수를 줄여서 외래강사 초빙을 자제하고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높이게 됨. 또는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를 증가시켜서 전임교원 담당 강의 비율을 향상시키게 됨, 따라서 교육의 질은 보다 저하될 수 있음.

- 평가를 통한 결과와의 연관성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 대학의 서열정하기로 변질, 정부정책에의 줄서기로 전도될 가능성 농후함,
- 평가지표와 대학교육의 질 개선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됨
-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만든다면 문제점은 계속도출될것으로 생각된다.
- 모든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정치적 공황의 발생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학자율에 두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것이다.
- 학교경쟁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이다.
- 일률적인 평가 잣대와 줄세우기로 인해, 각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로 학사관리는 지표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등한시 할 것. 이를 통해 결국 대학교육의 질 보다는 지표관리에 집중하게 될 것임
-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하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라 사료된다. 대학구조개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한다.
- 학교 퇴출을 위한 개혁이 주 목적이지 교육의 질 개선이 목적이 아니므로
-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어떤 식으로라도 평가해서 개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이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방해 요인 임.
- 형식적인 지표에 집착하여 실질적인 교육은 부실해지는 목표의 대치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관료주의화를 유발할 것임.
- 실질적 평가가 안되는것 같다. 특히 평가 항목이 문제
- 행정이 특히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학교육의 질 개선은 해결될 수 없다.
- "일정 부분은 개선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 개선 활동이 어느정도는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학생모집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허구적인 조치임
-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 바람직 /교육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학교육의 질 개선보다는 평가 항목에 대비하는 행정기관으로의 변질과 교육부의 통제에 따르는 형태 유지
- 망할 학교는 저절로 망한다. 교과부에서 이를 핑계로 대학을 줄세우고 있다.
- 지표 채우기에만 급급
- 자율적으로 진행될 구조개혁이 인위적으로 진행됨에따라 학교의 모—든역량들이 평가를 위한 준비에 투입됨으로써 대학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빼앗길수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대학교육을 위한평가인지 아니면 교육부 실적을 위한평가인지 ...
-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질은 향상된다..
- 대학의 질에 따라 학생들이 움직이기에 자연스럽게 문제있는 대학은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줄세우기 평가는 대학의 순기능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 평가의 기준이 교육의 질 제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존의 평가 지표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역으로 대처하여 오히려 대학 재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예: 전임교원 강의비율, 전체 수업 수를 줄여 비율을 높이는 일이 다반사이고, 전임교원들이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강좌 수가 대폭 줄어들음.)
- 국가 주도 대학 평가는 이제 지양하였으면한다.
- 사립대학 평가기준의 논리성이 부족함
- 외부 평가가 대학교육의 본질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대학경영자와 구성원의 노력과 투자가 대학교육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교육 내용과 성과에 대한 고찰이 없다. 무조건 취업만 시키면 되지 관련분야로 취업했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 가능하면 많은 대학의 기능과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교육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 교육의 본질적인 지표(예: 교수의 연구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지표들이 너무 많다.
- 자율 개선 대학이 되려고 여러 모로 노력(투자, 제도 개선 등)할 것임
- 각 대학의 상황이 모두 다른데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기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점수 구걸 기관화하고 있음. 교육부의 대학정책이 내실 있는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모든 행정력을 불필요한 점수관리에 올인하도록 하고 있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
- 교육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및 대학의 연구 및 교육 분위기 저해
-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에게 강의나 연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로 인해 행정적인 업무의 양이 훨씬 더 증가한다. 대학교육의 질 개선보다 행정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평가 준비로 인한 실제적인 교육의 질 저하. 다양성 시대에 안 맞는 대학교육의 획일화. 수업과 행정의 주객전도.
- 평가준비로 인한 실제적인 교육의 질 저하. 교육과 행정의 주객전도. 다양성 시대에 역행하는 획일화 척도. 자율경쟁에 의한 대학 존립 허용 필요.
- 지금 현지표로는 서울기반의 대학, 국립대학중심의 평가지표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기준이 대학 자율에 맡겨야 되는 본연의 교육정신들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 대학줄세우기로 지방 고등교육의 황폐화
- 근본적으로 대학의 운영은 대학에게 자율권을 주어야 하며,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적자생존의 원리에 입각해야 함. 교육부의 개입은 관주도 교육시스템으로 적폐라고 생각함.
- 대학교육의 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해진 과정이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각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실현하는 질적 성장으로 연결될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 틀에 맞추려만 하니 교육의 질 개선이 되겠는가? 대학은 다양성과 자율 속에서 학문 추구가 이뤄지고 창의적인 과학이 도출될 것인데, 행정하는 자들의 자기 입맛에 맞추려함은 우리의 미래를 죽이자는 행태일 것임.
- 행정적으로 잘 정돈되거나 재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대학들만 살아남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들은 도태되는 역기능이 생길 것입니다.
- 교육 질의 향상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항목이 부족함. (행정사항이 많음.)
- 행정편의위주의 구조고정, 학문의 자율성 위축
- 교육부 주도의 평가가 갖는 관료주의적 한계 때문에
-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대학교육만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 기본소득 도입 등 경제적 평등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전환이 필요.

- 교육의 질을 대표하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없음.
- 지표화, 수치화 등 정량평가의 공허함, 타율에 의한 행정중심 평가 및 그러한 개선의 한계성, 교육부 예측의 심화 및 지속성 탈피 못해
- 평가의 중점이 교육환경의 개선보다는 사학운영비 절감에 있기 때문에
- 대학 자율성 침해.
- 1단계평가와 같은 결과가 될 것이므로
-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충원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더 중요함. 대학 교육이 적어도 토론식으로 될려면 학과당 학생수는 고등학교 학급 학생수보다 적어야 함.
- 1주기 평가과정에 비추어보면, 총장 이하 보직교수들과 그 돌마니집단이 된 행정직원들이 평가를 빙자하여 왕초처럼 군림하며 대학의 주인 행세를 함. 그 연장선에서 양심적 일반교수들을 사갈시키고 초(수퍼)관료주의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면서 70년대 군대식의 각종 비리성 조작과 양두구육식의 쇼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니, 대학이 대형마트 혹은 사기조직인지 진정 교육기관인지 헷갈리게 만들.
- 취업률 향상 정책을 대학에 떠 넘기는 한 교육의 본질은 왜곡되고 질의 저하가 따른다.
- 시장과 경쟁의 논리로 교육의 장을 왜곡하여, 전인적 인간을 양성할 수 없는 교육 체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재 진행되는 대학교육을 망친 교육부의 책임 회피이며, 교육부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한 대학교육을 망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임
- 7번문항의 대답과 동일한 이유(대학의 행정화, 교육부 통제 강화)
- 이전 잘못된 평가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통한 2주기 평가는 그 한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놓기 때문입니다.
- 형식적 평가
- 구조개혁의 실질적 목적과 본질적 목적과의 불일치
- 평가기준이 매우 비교육적이고, 비학문적임.
- 학문 발전과 교육권 신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 대학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연구와 별개가 아니다. 대학을 취업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평가의 자세는 우리나라의 대학의 기여를 지나치게 한정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 교육부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비리 학교 척결에 있지 학교 통폐합 등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
- 구조개혁평가의 제시한 대학정상화 교육이라는 목적은 명분일 뿐이 대학감축과 서열화를 조장하고, 나아가 길들이기의 수단일 뿐이다.
- 구조개혁 평가기준에 맞추는 인위적 대학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기초과학 교육이 황폐화 되고, 관련 학과가 폐과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기 영합 특정 융합학과를 만들어, 대학들이 미래에 융통성 있는 인재 양성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양적 지표 충족을 위한 업무가 우선되므로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저해 우려가 있다
- 대학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식도 자신들에게 맞게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의 다양성과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지금의 평가가 유도하는 것은 교육 내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방식을 동일화 하라는 것으로 봉어뿔 찍어내듯이 길러진 사회 부속품을 길러 내는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뜻이다.
- 대학 평가의 취지가 대학 교육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진학률이나 교원임용률 등 외적인 부분에 토대한 줄세우기식, 보여주기식 평가로 변질되고 있음. 그러다 보니 대학들의 구조 조정이 학문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아니라 취업률 높이기, 외적 지표 채우기 식의 왜곡된 구조개혁으로 변질되고 있음. 일례로 소위 '취직 잘 안되는' 인문대 등의 경우 학문적 위상, 학생들과 전공자들의 진로 등은 고려하지 않고 관련 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식의 잘못된 행태가 자행되어, 결과적으로 학생 및 학문후속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조차 고려하지 않는 구조조정, 교수진과 학생들이 충분히 노력하여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공에 대한 재정 지원, 학생 선발, 교원 선발 및 대우 개선 등을 하기는 커녕 지원 축소, 교과목 축소, 비정규 교원 확대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특히 사립대학에서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음. 일례로 전임교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 채용 대신 비정년트랙,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으로 빈 자리를 메꾸으로써 학사 운영의 차질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교원들에게도 노력과 업적에 걸맞지 않는 형편없는 대우를 하며 사실상 착취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잘못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철폐 및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교육의 근본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찰에 토대한 새로운 대학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
- 대학통제 강화
-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대학을 더욱더 서열화시키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됨으로써 거의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악화시킨다.
- 근원적 해결이 아님! 대학은 교육 외 학자 양성에도 주목해야 함!

- 안 그래도 부실한 인문학과 사회학과 같은 기초학문이 사라지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대학기관을 몇가지 정형화된 기준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원래 대학의 본질을 퇴색시킨다
- 문제점들에 대한 보안 미비
- 대학 교육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요구되겠지만 그보다 우선 양질의 전임교원 확보와 안정적인 강사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평가기준이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음.
-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평가의 목적이 대학의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대안으로 보여지는 한 대학구조조정은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대학의 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 대학 내 행정은 대학수업 및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지표로서만 구조조정을 해왔음. 인간에 대한, 대학(학문을 위한)에 대한 배려 및 이해가 전혀 없음
- 장단점이 있음
- 뚜렷한 지향점이 없는 정량적 평가일 뿐!
- 교육투자에 대한 실질적 증대없이 단순한 서열화에 의한 구조개혁은 있을 수 없다.
-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할 뿐이다
- 대학에 대한 양적 평가는 구성원인 교수에 대한 양적 뉘달로 이어져 대학의 자유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킨다.
- 대학교육은 교육부가 아닌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함.
- 교육에 대한 근본목표가 없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개혁하기 때문에
- 양적 평가가 대학교육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대학마다 잘되는과 안되는 과 있는 거 아닌가요?
- 생존경쟁 지표경쟁 강요 및 하위 대학 죽이기 방식
- 지표(index) 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정규, 비정규직 교수, 그리고 학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잣대가 됩니다.
- 현행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등을 위하여 시간을 쓰기 보다는 평가에 더 열중하게 하게 만든다.

- 등급을 매겨 평가하여 통제하는 구조가 같고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 짝퉁 전임교원 양산 지표가 그대로입니다. 설립유형별로, 규모별로, 지역별로 적용할 때의 혼선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표 상당부분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고 새로운 올바른 지표도 대폭 추가하여 통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대학교육의 질 개선이나 학문 성숙은 요원합니다.
- 교육의 질 향상 지표가 왜곡
- 근본적 개혁에 관한 철학이 없이 구호에 그치는 형식적 개혁은 '개악'과 동일하다.
- 교육부의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 구조개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 "각 대학의 자율성이나 특성을 고려 인정하지 않고 교육부의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인문대는 통합 사라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학문의 상아탑으로서 대학의 위치를 위해서는 각 대학에 맡기고, 교육부는 교직원과 학생을 생각하는 행정적 보조를 해주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소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대학들을 과감히 도태시키는 것만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대학교육을 위한 첫번째 과제이다.
- 수도권과 지방, 명문대와 지방대의 격차 심화
- 구분 기준과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 그동안 방관해왔던 문제들이 갑자기 정리 축소시켜 전공과목들이 쓸모없어졌다는 회의적 생각이 든다 . 교육은 백년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 대학의 모든 교육 행정은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그것이 질적인 향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평가 항목에 부합하도록 형식적인 개혁에 그치는 경향이 강함
- 대학구조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
- 교육부의 개입이 크면 클수록 대학 사회의 자연스러운 정리가 왜곡됨(교육시장의 왜곡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 초래).
- 교육부의 구조개혁 접근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철학과 전략이 부재한 상태
- 교육적이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용으로 예산만 낭비한다
- 대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 결국 대학을 통제하고, 교육과 연구의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게 할 위험성
- 평가를 위한 평가, 평가 후 변화를 위한 투자 및 개선이 별로 없음

- 대학은 교육컨텐츠로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므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통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한계교육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차차 개선해 나가겠지만..
- 취업과 재학을 위주의 평가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극복과 건실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교육시키는 대학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사고하고 고민하고 가치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자기표현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주세요.
-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비전 및 자율적 결정에 맡길 문제임
- 내실보다는 지표에 맞는 교육이 될 것이므로 별반 차이없다. 게다가 그대로 뒤도 부실 대학은 자연도태될 터인데 교육부에 대한 로비로 인해 이런 저런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언명토록 해왔음. 공영형 사립대학도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됨
- 교육과 연구에서의 자율성 침해. 서열화조장.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기준
-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통한 국내 학문 생태계의 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 개선하게 될 것이므로
- 교육 질 개선은 대학자율에 의해 학생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 탁상행정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대학당국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지표를 대학교육의 모든 잣대로 삼고 있다. 이런측면에서 결국 중요한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소외시되고, 대학의 재정 및 행정, 교육의 모든 관심은 정량지표관리에 쏟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구조개혁의 선순환적 영향도 있을 듯 하나, 등급을 받기위해 쏟아야 하는 이런 투자가 과연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데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교수의 에너지가 과연 평가에 쏟아야하는 에너지인지 의구심이 든다. 학교 형태의 다양성, 설립목적의 다양성, 수요자의 다양성 등 다양성이 인정되는 학교로 나아가는 것이 대학의 서열화를 저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각자 존재의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 대학 지배구조(친인척및 비선조직지배 대학)를 감사하여 비리대학만 모두 없애고 나머지는 시장경쟁에서 스스로 살아남게 하는것이 바람직
- "평가가 아니라 조력으로 개념 전환
- 스스로의 자기구조 노력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음"
- 개혁인지도 의심스럽고 옳은 방향이라 검증되지도 않은 작위적 통제이므로.

- 본부의 형식적인 평가기준에 맞추려는 행정적 노력에 치중하여 실질적인 교육과 연구의 개선을 이루고 있지 못함.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좌 수를 줄이고 강의를 대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림. 취업률을 높이려는 각종 꼼수가 확대되고 있음.

11.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고등교육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서 중고등교육부터 대학 진학이후의 교육 모두 매우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 지역별 대학별 특성화 및 가난한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향상
- "1. 대학평가로 인해 대학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됨.
- 2. 대학구조개혁평가, 인증평가, 교원양성기관평가 등,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닌 평가 준비자, 평가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전락하였기에 평가의 종류를 축소, 중복되는 평가를 폐지할 필요 있음. 현재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양성기관평가는 절대적으로 그 기간을 5년주기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우수한 교사 양성이라는 교원양성기관의 궁극적 목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 교수들이 평가에 매달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임.
- 3. 수도권대학의 제2, 제3 캠퍼스 설립 불허. 현존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겪으면서 수도권대학의 또 다른 캠퍼스 설립을 인가한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지방대학 죽이기 행정임"
- 보통인재도 중요하지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탁월한 인재육성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기술을 아는 인재, 부족하다는 이공계 인재의 육성은 더욱 중요하다.
- "1.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 교육의 획일화 초래됨. 이를 해소
- 2. 지역균형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모집과 입학정원의 감축,
- 3. 지역대학의 자율 개선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 4. 등록금 인상 동결 해제
- 5. 국가장학금 지급 액수와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그 예산을 대학교육환경 개선 및 학사 제도 선진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 등
-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이나 국립대학은 우수한 학생들과 넉넉한 재정을 바탕으로
- 교수나 직원의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좋은 평가를 받고 대학을 운영할 수 있음. 하지

만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학업성취가 낮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 교수들의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음. 과연 어떠한 대학이 질적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인지 평가주체 및 정책수립자들에게 묻고 싶음.
- 사명감을 가진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대학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사학의 경우 비리가 발 붙일 수 없는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재단을 견제하고 대학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사학비리의 규제가 대학구성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함.
- 대학을 통제하려하지 말고, 못하는 대학을 억지로 잘라내는 것보다는 잘하는 대학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 대학들을 줄세우는 것은 교육부 고위관리자들이 자신들의퇴임 후 갈 곳을 찾는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수도권 대학에는 역차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통합, 연합체계 공약을 방향이 옳으니 만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함. 전체를 통합하기 보다 도서관 통합, 입학통합, 수의대통합, 간호대통합 등 부분 통합부터 이루어나가야 통합의 긍정, 부정 효과가 나타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대학의 적폐청산: 교수의 자율권을 빙자한 수업부실한 상태의 학점 남발(1강좌를 수강한 학생에게 동일한 2강좌 담당교수로부터 학점을 받음), 연구비 부당수령과 학내문제의 고소고발건 난무, 조교와 학생에 대한 교수 갑질, 장애인 비하 발언교수의 자질을 문제삼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와 이를 문제 삼는 학생을 고소하겠다는 교수의 횡포.
- 자율을 부여하되, 충원이 어려운 한계대학에 대한 정리는 필요함
- 특성화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대학 개혁을 주장하면서 모든 대학을 같은 잣대로 가위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인듯
- 세금이 지원되는 모든 대학에 대해, 국가의 회계감사권 인정
- 대학평가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꼭 해야한다면 통합하고 주기도 충분히 늘어날것입니다. 지금처럼 각종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개선책 수립을 하는 사이에 또다른 평가가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 개선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 대학에 대한 정부 및 교육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
-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교육을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점을 강점으로 삼아 국가 발전을 이룰 계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대학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등 미래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천편일률적인 교육부 정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강화해주시고 사립학교법인이

단지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교육부가 감시감독하는것이 가장 좋은 대학정책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대학 서열화의 완화가 시급하고 더 나아가 대학에서의 신입생 선발이 초중등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바 대학 자체가 학생 선발에 단순한 지식 정도의 암기가 얼마나 잘되어있는지에 대한 선발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정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의 자체적 논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바람
-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 전 정부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다시 수립하길
- "정부로부터, 특히 교육부로 부터 독립된 교육개혁을 위한 특별기구를 상설기구로 설립하고, 학계와 종교계로부터 엄선된 불편부당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가능한 한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에서 공부한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이 위원들은 적어도 5년 내지 6년간 신분보장을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교육개혁은 줄속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람.(자율적인 학문연구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지원도, 간섭도 하지마라.
- 대학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의견수렴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 지방대 육성정책 특히 국립대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펴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시 말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립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듯합니다.
-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대학의 이념이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대학을 발굴하여 홍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주도의 개혁보다는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할 수 있는 대학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예를 들어 교수들과 관련하여서는 성과연봉제 폐기, 학생들과 관련하여서는 절대평가 실시 등)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 순수 학문에 대한 배려 필요. 일률적인 등록금 동결은 패착. 교수 복지 문제 고려.

- 대학의 존망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으면 퇴출될 수 밖에 없는데 강제로 구조조정할 경우 승복하기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는 사학법개정을 통해 비리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인구 감소, 고령화, 지능정보사회 등 사회 변화에 따라, 20대 초중반의 대학생 교육만 아 아니라, 변화된 사회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시민 교육에 대한 요구를 대학이 수용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세우고 대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등 교수들이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획일화되고 양화된 교수 평가를 제고해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연구/교육 등에 대한 중복 평가로 대학과 교수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지난 정부 시기의 제도도 손질하기 바랍니다.
- 교육부 마피아 축출, 창의력을 위한 예체능 교육 확대
-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공적책임이 전제되어야 함
-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대학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 1. 대학 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고
- 2. 교육부는 모든 대학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체제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년도별로 영역별로 평가지표로 제시(예를 들면 2018년은 대학학사지원조직 체계화, 2019년 교수학습능력) 하여 대학이 서서히 변화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함 "
- 사학 법인을 감시 감독 관리하는 법적 체제를 수립 시행하고 대학을 교육부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하며 교육부 관료들의 정책 실패에 따른 문책을 통한 인적 청산이 최급선무로서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참여한 관료들이 여전히 교육부에 안전하고 있는 현실은 적폐청산의 주요 대상이다.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개선의 노력의 정도를 절대평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대학간의 자율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 책임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것임.
- 수도권 명문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없애고,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서열화 완화 등에 기여할 것임.
- 대학의 존재 이유가 되는 학문의 자율성, 모든 학과의 존재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의 분야가 대학입학시에 주어져야 합니다.

-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사업지원을 최소화하고 국립대의 비중을 확대하면 별도의 구조개혁이 필요가 없음
- 대학교육에서 말 그대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대학의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 교육환경에서 지방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은 요원하며 통제 중심의(획일적 평가항목 중심의) 대학교육 정책 보다는 제대로된 대학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 특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대학교육을 개혁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그릇된 출발이다.
- 입시제도를 보라. 지금까지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입시제도와 교육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 지금도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교육부 장관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찬, 이*호 이다.
- 그들이 교육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교육은 더 암울해졌다.
-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 공부를 하기 원하는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 대학과 교수는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보고서 작업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학교육 개혁의 출발점이다.
- 과거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대학에 자리를 잡은 교수들이 더러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교수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환경만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
- "대학의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없애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바탕을 두고 대학의 지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교육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 지원에 있어서 직접 지원하는 교수에 대해서만 연구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만 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특히 학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국 대학 연구진들과 연구하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 저명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국내 저널에 게재하는 것에 비해 그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국내저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울러 기존의 다양한 사업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 "1) 인위적 전공비를 조정 철폐(이공계 육성책이 인문사회계열의 폐지로 연결되는 폐단의 인식)
- 2) 국립립대학의 책무성 강화(신규 육성학문 지정; 문/사/철 담당; 국립대간 동일학문 정비 등) "
- 대학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대학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 개개인들의 지원신청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어떨지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즉,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잘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추천과 추가적인 정성적 평가를 통해 대학의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하는 것을 어떨지요?
- 속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공영형사립대학 추진
- "대학교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질 낮은 대학을 폐교 조치 할 경우 해당 대학의 교수 직원들을 위한 구조책이 전무한 상태임. 교수들의 경우 어릴 때 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성실하게 학위과정을 거쳐 힘들게 대학 수가 되었음. 그리고 지방 대학의 교수들은 학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입시, 학사운영, 수업, 행정업무 지원, 대학원생 지도 등 수도권 대학에서는 상상도 못할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해당 대학이 문을 닫았을 경우 교수들과 직원을 위한 구제책은 전무한 상태임. 결국 교수와 교직원의 인생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시키는 결과가 예측됨. 하자미나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대안책 모색을 간절히 요청 드림
- 이번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 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서열화가 문제인 것이지,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출납'로, '노래 부르기'로 대학 입학 결정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또 다른 경쟁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서울대를 가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평가와 상대평가의 논쟁도 어떤 것이 서울대에 들어가기 좋은지에 따른 논쟁일 뿐이므로 절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혹은 완화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대학 교육 개혁도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서울대가 상위권 학생을 휩쓰는 상황에서는 대학 교육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대학은 연구와 학문의 장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임.
-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수확보율과 관련된 항목과 연계하여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청산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보다는 직접 대학교직원들에게 연금 호봉에 따른 일정 정도 급여 지원 체계를 위한 정책 필요.
- (본 대학이 해당 되더라도) 존립이 어려운 대학은 빠른 시일에 예고 폐교 처리
- 지방 국공립 대학 중심으로 사립대학 흡수 지방 중점 대학 육성"
-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부의 대학 통제를 하지 말 것
- 대학의 지방화 확대 지원과 과감한 구조개혁
- 대학교육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집중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 인구 집중화와 대학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 교육부의 대학 통제를 최소화하고 대학 자율에 의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대학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투자! 대학의 질은 대학의 재정규모에 비례한다! 등록금 낮추고 세계적인 대학? 6.25 때 발상. 등록금 낮추려면 국가에서 파격적으로 투자하라!
- 국립연합대학 또는 지역 거점대학 육성, 비리사학의 개혁으로 대학간 서열화 문제를 해소해야 함. 우수학생 선발에만 치중하고,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함.
- 진정한 대학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관료들의 안이하고 상명하달식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필요와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인사나 행정, 재정 등 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
- 특정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학사과정을 개편하고, 평가 지표를 바꾸는 것은 교육개혁의 결과일 뿐이지 동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특정 지표를 만족하기 위해 겉모습을 수시로 바꾸기보다는, 학생을 사람답게 길러낸다는 원대하고도, 숭고하고도 무거운 원칙에 충실할수록 사회와 기업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안에는 비록 희미하게나마 진정한 교육을 모색하는 운동들이 존재합니다. 대학이 그런 내적인 운동을 스스로 일으킬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 대학 자율성 보장
- 정부가 대학에 간섭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대학정책
- 사립대학법 제정

- 대학이 취업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전문지식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이 연구개발 투자, 인적자본 투자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총장 직선제 보장을 비롯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 보장
- "1. 교육부 구성을 국공립, 수도권과 지방, 대규모와 소규모대학 출신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지 않고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행시출신이 독점하므로 다양한 대학현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여 탁상행정의 폐단이 심각함, 공무원임용에 관한 법규 등의 제한이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함
- 2. 전체 대학생의 85%가 사립대학재학생이므로 사립대학 문제=한국대학의 문제인데,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 세습과 족벌체제임, 2-3세대들이 상속세도 내지 않고 사유화하는 데서 모든 부정과 비리가 싹틔,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개혁도 기대하기 힘들
- 3.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힘들면 대학평의원회, 교수의회 등 견제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키워서 재단과 대학당국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음"
- "1.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목적성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2. 일반중고등학교의 공교육 붕괴에 따른 학습지연과 학습부실이 전문대학 및 지방 일반대학으로의 책임이 전가됨.
- 3. 대학의 평가는 교육환경과 지원체제 구축 측면에서 분명 효과가 있으나, 잦은 평가(기관평가, 구조개혁평가, 학과단위평가, 재정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감사 및 평가)는 서로 다른 지표의 경우 중복적인 서류작업이 필요하고, 증빙자료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들이 추가됨. 이로 인해 실제 추구하고자 하는 각각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와 준비 등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음. "
- 획일적인 평가 잣대는 아주 큰 틀에서만 적용해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자율적인 변화유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억지로 한다고 대학이 변한다면 무늬만 변할 것이고 진짜 중요한 변화는 오히려 더 억눌릴 것이다. 자율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 대학 자체의 구조개혁 하향식 구조개혁, 동일 잣대 탈피, 개별 전공 특수성 인정, 단기적 결과보다는 멀리보는 기다려 줄 수 있는 개혁, 취업과 연계시키지 않는 평가. 취업은 대학과 관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취업을 향상용 대학의 본연의 과제로 연계시키지 말 것.
- 대학입시, 등록금책정 등 대학운영에 좀 더 자율성을 부여
- 학교평가에서 취업률, 임용률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지 않음. 대학의 특성화를 지방의 산업과 연결시켜야 함에도 전혀 연결하고 있지 않음. 수도권에 너무 많은 대학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일들을 대학교육의 개혁으로 삼아야 함

- 인위적인 정원 감축 중단
- 대한민국 대학교육만이라도 어느지역에 위치하고 있던지 대학 자체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 할 수있는 자율권을 주십시오
- 고등교육 지원 재정을 확충해서 과도한 사학의 비중 줄이고,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 사학적폐청산!!! 우리 평택대학교는 지금 사학 적폐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교육부 감사원 검찰 모두 방관하고 있습니다...제발 적폐청산을 위해 관선이사를 보내주세요....
- 고등교육 예산 확보의 법적 보장을 통해 자주적, 민주적 시민 양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 평가라는 방식을 철폐. 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성원들을 불필요한 일에 휘둘리게 하는 원인임. 취업률을 왜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가!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하는 취업을 왜 일선 학과 교수들이 총대를 매야 하는가! 모든 대학이 직업대학이어야 한다면 전문대학은 왜 필요한가요. 유지취업률 맞추느라 졸업한지 1년 넘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취업시켜야 하는 현실을 아는지요!!!
- 대학의 자율성 제고 필요/획일적 평가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대학 자립 및 육성의 어려움 해소 필요/기관인증 평가와 구조개혁평가로 평가 부담 가중 해소 필요
- 한국의 사교육 문제의 근원은 대학서열화에 있다. 국립대를 묶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하여, 고등학생들이 여러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 prime, ck, link 등의 사업으로 대학교수가 계획서 쓰고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원으로 변화하였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 힘쓰는 일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에 사업을 통한 대학 통제와 지원보다는 대학등록금 인상과 국가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통해서 학교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특성화하여 살아남도록 자율경쟁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 제발 대학교수 본연의 학문과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좀 제대로 소신대로 하세요
-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
-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학은 평가에 치여 대학 본연의 목적인 우수한 인력을 키우는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음. 평가를 가끔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것저것 하다보면 교육과 연구에 힘써야할 교수들이 평가준비를 하느라 다른 아무것도 못함. 대학은 자율 경쟁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음 .

- 물론 대학의 자율성도 존재하고 대학의 재무안정성도 건실해야 하는데 학생이 급감하고 있는 마당에 모든 지표가 성과위주의 체계로 서열화 되고 있다. 많으면 줄이고 없애고 모자라면 늘이고 하는 정책이 없어져야 한다. 지역이 살고 그 주변 상권과 대학의 분위기가 살려면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전문대와 대학이 서로 상존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전망이 필요. 일정 시기 동안의 혼란 감수.
- 지방대학유지 방안
- "대학 평가제도가 불가피하나 각 대학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
- 인문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학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단순한 평가보고서에 의존하지 말고, 쓸데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학으로 하여금 재정적 지원에 목매게 하지 않기를 바람
- 사학재단의 전횡에 대한 과감한 수술
- 대학의 교육은 대학에 맡겨주시고, 대학을 평가하되 대학법인 재정의 투명성과 교육비 환원율, 강좌당 학생 수 이런 대학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해주길 원함. 프로그램을 몇 개를 몇 명에게 행했는지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함에 따라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끌려다니느라 본연의 학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임. 국민의 혈세는 온갖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 사대강에 투입된 비용보다 더 쓸데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함... 대학 교원의 비정규직 양산, 하위 연봉자 양산 이런 일들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 누구를 위한 구조개혁인지... 대학 학생정원 증원, 대학인가...모두 교육부가 자행했던 일인데 이제 와서는 도대체 쓸데없는 평가를 통해서 대학정원을 줄이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 이 순간에도 지방대학은 스물스물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음. 이렇고도 정원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교수와 학생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합니다. 제발...
- 대학 서열화, 수능 및 대입 제도 개선, 국립대 강화(특히 지방)
- 대학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 대학이 구조저정이 되면 대학 재산을 재단에게 넘긴다는 뉘앙스를 펼치니 대학은 대학을 적극저금로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밀쳐야 본적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기준만 제시하고 대학 스스로 살길을 찾도록 해야한다.

- 사립대학교의 공영화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재정수단을 마련할 것.
- 비리사학퇴출!!!
- "우리나라 교육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 누구나 자유로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매 학기말 다음 학기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학생들을 추리고 나머지 학생들, 즉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여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하여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다른 대학으로 자유로이 편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듭니다.
- 취업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교 졸업생이나 학업 기간의 차이만큼만 임금이 차이나도록 임금체계를 조정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능력에 따른 임금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합니다. 즉 유능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졸업자보다 더 높은 임금이 가능하게 합니다.
- 그리고 국가의 장래와 경쟁력을 위하여 연구에 매진할 학문후속세대를 기르기 위한 높은 수준의 대학원 교육을 강화합니다.
- 특히 연구비의 집행에 있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극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비를 낭비하지 마시고, 가급적 많은 수의 연구자들에게 소액의 연구비를 꾸준히 정년 때까지 지급하여 수많은 풀뿌리 연구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그 속에서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연구장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관리하에 두시고, 대학원생 인건비는 현재 교수가 하듯 대학원생이 직접 연구기관에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교수는 대형 장비비와 학생 인건비에서는 손을 떼도록 합니다."
- 유사한 대학 평가가 너무 많다. 대학구조개평가도 인증평가의 자료를 부분 사용해서 쓰면 되는데 일부러 중복된 보고서를 준비하느라 인력 낭비.
-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노력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5년 임기의 정부가 큰 틀을 바꾸려고 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큰 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장하는 합의가 먼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 점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어떤 정부라도 교육에 관한 한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증액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개혁방안 실행
- 부실 대학 퇴출, 대학 통폐합, 학부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학 교육 체제

- 대학의 교원 충원을 확보를 통한 시간강사 문제 해결,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립대학에서의 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이 필요함.
- 교육부 해체.
- 사학비리 대학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영형대학 실현
- 평가지표에 의한 서열화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므로 시정되어야 함.
- "중고교육과정을 독일식으로 분화하여, 1) 대학가서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룹(대학진학), 2) 중학교 마치고 직업교육을 배우면서 3년간 공부할 그룹(현장 투입), 3) 1과 2 사이의 그룹(현장투입과 동시에 전문대학 진학)으로 다른 교육목표를 세울것. 그 비율은 현재수준에서 출발하여 30: 40: 30 정도를 목표로 한다.
- 대학은 교양과정을 과감히 없애고 입학 후 바로 학문의 수준 높은 공부를 시켜서 양질의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임.
- 대학은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숫자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임. 국립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사립대학은 모든 지원을 끊으면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임.
- 대학평가를 중지하고 대학구조조정을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
- 기존의 교육부의 역할을 대학행정지원으로 강화하면서 자치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선회가 필요함.
- 입시제도 개혁만이 한국 교육 문제 해결. 그러면 대학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임.
-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방법 획기적 변화: 특성화사업 등의 지원에서 기본 대학교원 인건비 지원 등으로.
- 대학의 자율적 운영: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은 어차피 자율적 경쟁 체제에 돌입하였음. 대학이 알아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정부는 대학 자율권을 인정할것.
- 교육개혁을 모두 교육부의 통제를 통해 한다는 발상을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잡일(쓸데없는 문서 작성)이 너무 많습니다. 즉, 행정편의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 구조개혁 평가를 폐기하고,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사학적폐와 비리재단 퇴출, 70% 이상의 관선이사제도, 대학구성원의 생존권 보장
- 교수노조합법화"
- 교육부는 대학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문재인 정

부는 교육부의 그런 구조를 없애야한다.

-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대학평가지표에 가중치 높게 넣어 오너의 독재와 재단의 전횡을 막고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 일률적 평가기준 지양(아마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은하지만), 교육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 학생 선발에 있어 대학 자율성 보장이 시급함. 경쟁사회에서 어차피 사교육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능 없애고 예전 예비고사 식의 자격시험과 함께 본고사 부활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1.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위해서는 국립대와 사립대학 분류가 전제되어야함
- 2.사학재단의 자율성 보장과 당국의 관리감독 균형정책 마련
- 3.지방사립대의 지역안착을 위한 특성화사업 재정지원 지속 확대"
- 성과연봉제, 연구업적으로 교수 평가에 대한 대안 마련
- 사학의 부정과 비치 척결과 비수도권 대학의 생존을 도우는 국비지원, 대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공영운영의 강화
- 교육부를 해체하거나 교육정책 결정기능을 시민배심원에 부여해야함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학의 부패를 강력히 처리하여 학문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 현재 우리 사회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성공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학이 취업준비 학원으로 전락한 현 상황도, 학군 때문에 생긴 부동산 문제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추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학이 취업을 등 부차적인 목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율적인 학문 추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을 더 이상 오래 끌면 실망이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학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개혁안을 작성하고 추진할 것.
-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짜여진 틀 안에서 억지로 지표 위주로 맞추다보니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근본적인 교육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 대학이 본연의 특성에 부합하여 운영되면서 다양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됩니다.

- "교수들이 하고싶은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성과급 연봉제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대학회계법이 초래한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의 성과에 따른 항목별 지급도 폐지되어야 함. 이러한 것들이 연구와 교육을 내적동기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점수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들."
- 또한, 국립대 총장 간선제를 직선제로 다시 돌려야 함. 대학의 구성원이 원하는 총장을 선출하지 못함으로써 총장의 대표성이 축소되고 제 기능을 못함."
- 사학재단의 평가를 통한 대학 민주화 확충
- "자율성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 운영은 각 대학에 맞겨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는 정부의 기준이 아닌 대학 각자의 자율성으로 얼마나 대학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율성을 가지고 독특하게 운영하는 대학은 학생들이 평가할 것이고,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으면 스스로 도퇴될 것입니다.
-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대학은 학문을 하는 상아탑이지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취업을 위한 공부는 고등학교에서 끝나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대학을 가기 위한 전단계의 교육기관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더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간 대학을 활성화시켜 직장인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더욱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설픈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 미국처럼 accreditation system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적어도 사학분야는 시장 경제 논리에 대학시장을 그대로 노출시켜 자율 경쟁 구도속에서 스스로 대학 경쟁력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서울 및 수도권에 과밀하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대학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과연 합리적인가 의문이 된다. 인위적인 그리고 정부 중심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평가 지표 형성과정에서부터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가 적은 지방에 거점 국립대 위주의 교육규모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인구 분산 정책이 먼저 성공한 뒤 지역 대학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 성인교육인 대학을 초중고 교육과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것 자체가 문제이고, 많은 교육제정을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있기를 바란다. 실험실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따러 다니는 교수를 어찌 바라보는지 의문이다. 교실밖에 없는

교육현장을 숙고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 교수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되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외부에서 평가하고 간섭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부 사학부패나 비리 등 잘못하는 곳은 감사를 강화해야겠지만 잘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 곳들까지 점수를 메기고 성적을 공표하는 행위는 고등교육의 현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충분히 영리하므로 거꾸로 보상이 없는 학생교육에는 열정이 없어지고 평가 기준에 도움이 되는 활동만 하도록 스스로 강요될 수 있습니다. 각기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수는 연구와 교육, 학생은 순수하게 학문을 배우고 토론하며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생수가 줄고있는데 너무 많은 우후죽순식의 대학이 어느정도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학의 역할을 다변화 하여 평생교육원이나 직업교육원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나 순수학문을 주로 하는 대학을 나누어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학벌주의나 대학서열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주기 구조조정 폐기 원점에서 대학구조조정 재설계
-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즉시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고해야한다.
- 대학서열화 완화 및 차별적 특성화를 위해 1)초중등 공교육의 정상화에 연계하는 대학선발 제도 개선, 2) 대학특성전문화를 전제로 한 구조개혁 지원 --고유영역의 집중 또는 통합을 통한 서열화 철폐(예: 단일학점제교류, 대학간 협동 학위), 3)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4)사회진입시 출신학교 차별 철폐를 위한 체제(법령, 제도) 구축
- 대학교육은 대학에게 맡기고 부조리한 대학은 정부가 감독과 계도를 하여 각 대학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 주기 바랍니다.
- "▶'사학 소유주'들과 교육마피아의 야성을 무너뜨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은 효과적인 정부 정책이며, 주무 장관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확한 인식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 ▶""박근혜표"" 적폐정책을 기어이 실행에 옮기겠다는 교육부는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 교육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다.
- 2015년의 1주기 대학평가가 그러하였듯이 이 틀을 그대로 답습한 이런 식의 평가는 대학 발전은커녕 대학을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 버린다. 일부 지표를 수정 보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틀 자체를 새롭게 해야 한다.

- 부정비리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뻣센 대학평가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부정비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
- 교수사회가 무관심하고 방임함으로써 자율적인 개혁이 불가능하여 교육부가 타율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 교육부가 대학을 쥐락펴락하게 만들도록 방임한 교수사회가 각성해야 한다.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평가하는 기준과 내용이 같을 수 없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이 있고 사립대학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 사립대 법인에 대한 평가와 대학에 대한 평가는 구분되어 시행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예결산을 의결하고 수익용재산을 운영하며 총장을 선임하고 모든 규칙들의 제개정을 의결하는 대학법인을 따로 평가하여 교육여건부터 바로 잡아 놓아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나아갈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다.
- 대학에 대한 평가는 등급평가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평가가 되어야 한다. 하위 50% 대학들의 정원을 집중 감축한다면 이미 1주기 평가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지방대학들의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므로 수도권 지역의 정원의 모집부터 감축 내지 폐지를 단행해야 한다.
- 교원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 지금의 대학평가는 불법적인 조치들의 종합판이다."
-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대학의 모습으로 가려면 먼저 교육과정부터 개정해야 한다. 대학교육과정 전면개편과 교육방법 개선으로 인재양성을 해야한다. 기초과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사학법인 전횡방지위한 사립학교법 제정
- "사학법 개정
- 법인 평가
- 교수협의회의 법적 설치 의무화
- 총장 구성원 직접선출"
- "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온갖 평가를 단일화 또는 최소화 해주세요.
- 기본적으로 전문대학은 구조개혁평가, 전문대학평가인증, 특성화사업, 간호과 평가, 유아교육과평가를 기본으로 추가적으로 링크플러스사업 등 너무 많은 평가사업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행정 서류위주의 사업이다보니 하나의 업무를 위한 각 절차, 행정서류가 교육을 위한 시간보다 더 많이 할애해야 하는 어려움이 큼니다.
- 이런 것에 교수들은 직원보다 행정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교육을 위한 교수의 지위는 약화되고 행정직원의 지시에 따르는 기형적 학교구조도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의 엄정성, 체계 등을 확립한다는 명분에 교수를 통제하고 학생들의 이기적인 민원에 취약하여 교육을 소신있게 할 수 없는 병든 모습이 전체 교육계의 모습인것 같습니다. 학생은 학점주는 대상자로만 교수를 이해타산적으로 상대하고 그런 학생들과 학교당국의 존중감 없는 실적 만드는 존재로만 교수가 전락하니 교육이 건강하게 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일부 물의를 일으키는 교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명예롭게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려는 교수들의 어려움도 들여다 봐주시며 대학의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대학발전 비전마련이 시급 혹은 최소한 대선공약의 즉각적 실행
- 사학의 비리척결 및 자율성
- 악덕 사학재단이 자행하는 비리(횡령, 배임, 불법적인 학사관리, 학생들을 속이는 허위 대학홍보, 교수를 입시에 동원하고 급여를 등록금과 연계시키는 등 영업사원화...) 척결
- 폐교대학교수 전환배치 (악덕사학은 폐교가 되면 교수들이 실업자가 되는 현실을 악용하여 교수들을 압박하여 온갖 비리를 자행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이에 저항하지 못함)
- 사학의 의사결정권을 진정한 주인(학생 교수 직원 동문 지역주민) 부여
- 관 주도의 평가를 통한 통제 폐지, 큰 그림은 국가가 그리되 대학의 운영자율성은 보장(특히 사립대), 설립 주체에 따른 대학 다양한 운영목적의 존중, 국립대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 제한, 사회와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 개발을 위한 대학의 책무 요구 등
-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가 부패 비리 없는 사학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
- 사학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 비리대학들을 퇴출해 주시고... 교육부 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도 조사 안하고 비리사립대를 비호하는 관습을 타파해 주세요..
- 일관된 평가지표 보다는 대학의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

- 서울과 지방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 서울지역 대학만 살아남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과 서울지역 대학 평가 차별화가 필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발주 연구과제/사업에 대해 일정금액(사회과학/정책분야의 경우 약 1억원) 이하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참여 금지. ==> 대학의 연구활동 참여 강화로 현 대학의 위기 극복 필요.
-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학을 교육기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 연구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기능은 교육 이외에 연구/혁신도 매우 큰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 ==> 주로 정부사업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 ==> 그런데 현재 정출연 PBS제도, 최근 정부발주 사업 선정 시기문제 등으로 인해, 대학이 참여할 기회가 축소되어 있는 현실. 정출연 독식. 문제 해결이 시급."
-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환경 조성하고 비리연루 설립자나 학교운영관련자는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하는 법률 제정
- 사학비리 척결
- 사학지배구조를 혁파, 혁신해야 함. 그래야 사학비리, 사학적폐 척결 가능함. 그것없이 사립대학구조 개혁은 무의미함.
-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철처
- 대학 스스로 개혁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협조하고 온갖 시시콜콜한 것으로 돈을 쥐고 갑질하는 일은 민주화된 정부이니 이명박,박근혜정부 이전으로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 사학법개정
- 부패사학 정리를 통해 질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 지방균형 발전을 위하여 2020년 부터 최소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을 25%이상 감축할 필요가 있음
- 많은 건전한 지방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교육부가 주도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재원을 정원감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특수한 목적의 교육지원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음.
-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악화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함.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립대학은 우수한 교수와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의 부실이 초래됨. "

-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교육부만큼 대학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교육부의 기능을 순수 교육지원역할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의 존립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방에 주요한 국공립대학교를 집중지원하고 부실한 대학들을 정리하는것이 필요함. 수도권으로 몰리는 대학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균형에 핵심적 사항이므로, 서울대 학부 폐지, 주요 사립대의 지방이전 등의 조치가 검토되어야 함.
- 대학생취업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생대상으로 진로 교육 철저히 할 것, 속담; 누울 자리 보고 발 뺀다.
- 독일 속담에, 비틀어진 나무를 원망하지말고 그 뿌리 밑을 파보아라고 한다. 정부에서 대학을 빚으려 하지말고 스스로 고사하게 방치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감하고 따라오게 할 것
- 2주기 대학평가사업 즉각 중단하고, 고등교육 청사진과 혁신 방안을 제출하라.
- 부패 비리 특별사학 철폐. 부패 비리 특별사학과 밀접히 연결된 교육부 관료 등 교육부 적폐 청산. 취업 학원으로 변질한 대학을 대학 본연의 모습으로 정상화 시켜야 됨. 취업을 강요도 이명박 정부 이래 대표적인 대학 적폐 중의 하나임.
- 첨단 분야에서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지방대학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 추진
- 중복된 평가를 하나로 합쳐 실시함으로써 평가준비로 인한 대학의 피로를 줄여 주십시오.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 대학의 개혁은 대학의 자율과 시장에 의한 자연적인 합의에 맡겨두고 정부와 재계가 경제본연의 문제에 치중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자신들의 역할을 대학에게 취업율을 올리라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 This is an amazing country and I love being a professor here but the education system is terrible. I know that President Obama said that America should change and be more like Korea but if he knew what the students actually had to go through he would never have said that. This education system is broken from Elementary school until University. Big changes need to take place here for the country to thrive in a global world.
- 학령인구 감소 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 및 비수도권 대학의 존립위기 해결
- 대학졸업 후 기업입사 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제도적 철폐
-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것

- 대학의 구조조정은 큰 틀에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별(각 지자체별)로 나누어 해야 된다고 대학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CS라고 하는 교육제도는 우리 대학의 특성상 모든 학과에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계열은 NCS에서도 유보로 한 것을 재정지원을 받기위해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가고시라고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 낭비와 교수들에게는 쓸데없는 서류처리로 인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합니다. NCS 교육제도를 없애 주길 부탁드립니다.
- 시장 원칙(학생의 선택)에 따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행정적 투자를 늘려야 함
- 정부의 너무 많은 간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한다'의 원칙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 대학의 경쟁력을 대학 스스로 강화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도태가 예상되는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의 선제적 마련을 통한 연착륙 정책 시행. 연착륙 정책에는 사학법의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비수도권 존립해결, 자율성회복
- 비리사학척결하고, 사학에도 재정지원을 통한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교육혁신지원 하도록 함. 그동안 사학비리의 온실인 산학협력단을 개혁하고 그를 통한 메이커교육 등 재정지원을 하도록함.
- 취업률을 대학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됨.
-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반대합니다
- 저출산 시대에 대학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개혁을 꾀할 수 밖에 없음. 정부가 인위적인 잣대를 가져다 댈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개혁하려는 동인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음. 부실 대학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가 필요함
- 지방 사립대학의 비인기학과, 전공의 구조조정에 구성원 의견 적극 반영
- "대학의 자율을 확보하고 강제적인 통제는 다른 문제점을 야기 할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의 4년제는 수도권의 학점은행제에도 밀리고 있는 시점이다. 학점은행제의 원래 취지인 평생교육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위를 난발하는 폐단을 수정하는 것이 교육 개혁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변화,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교육방향을 기존서열화 된 대학이 아닌 지방소재 우수대학과 전공경쟁력 우수대학에 정부지원이 편성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

- 학생에 대한 문제 만큼, 교수에 대한 처우의 개선도 필요함. 교수의 종류 형태 등 교수란 이름하에 너무 많은 형태가 존재, 일원화 필요함.
- 장기적 안목에서 서서히 진행하기를... 과도한 속도전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차적인 위험부담이 있음.
- 교수들의 신분 보장(비정규직 철폐), 강의 및 연구 환경과 자율성 보장
- 대학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모아 각각의 환경과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세워 진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지방 사립 대학의 존립을 위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함.
- 정부의 보조금을 줄여서 운영을 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대학교육 지침에 잘 준수하는지만 평가하여 제재/퇴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
- 교육부를 해체하고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고등교육(대학)은 국가 R&D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과학기술 담당 부처에서 지원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대학의 존폐가 결정되어야 함.
- 사학 특히 대학이 일반 기업체 처럼 무소불이의 힘이 있는 이사장과 그 친척 특히 총장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대학을 소유물이 아닌 공적인 기관으로 인정하고 모든 재정과 인사가 투명해여야 한다. 아직도 대학은 마음대로 인명하고 멋대로 휘두른다.
- 대학의 본질 회복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 평가 기준이 취업률 등으로 획일화 되면서 대학의 본질은 간과한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교육부의 권한 축소 내지는 폐지
- 사학부패, 비리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시키고, 비수도권 대학의 존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 정부에 의한 구조개혁이 아닌 대학의 자율성 보장
- 사립학교법 개정-노무현 대통 때 것으로 환언
- 정부가 교육에 자꾸 간섭하려 하지 말고 대학 교육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 범죄수준의 비리 대학만 잘 골라내주는 역할만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
- 정부가 교육에 자꾸 간섭하려 하지 말고 대학 교육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 범죄수준의 비리 대학만 잘 골라내주는 역할만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

-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대학의 건강성을 세워주는 쪽으로 교육부정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부 적폐 청산
- 학업의지가 없는 학생들의 퇴출 및 재교육(재배치) 시스템 마련
- 각 대학마다 갖고 있는 철학과 교육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주기 평가 때 사용한 평가지표에 대한 실질적인 유효성을 파악해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학교가 서로 경쟁하여 다른 대학과 앞서기 위한 단기적 처방에 몰두하게 만드는 경쟁방식의 재정지원과 구조개혁이 아니라, 교육적 활동을 장려하고 비교육적 활동을 숙아내는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람
-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평가기준의 유연성
- 사학 비리 척결, 교육부 공무원 소위 교피아 척결
- 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준은 논리성 부족으로 하위권 대학이 상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전 정부로부터 넘어온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 확립을 다시 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제하는 식의 평가는 민주적 방안이 아닙니다.
- 후발대학들의 대학의 구조개혁 보다는 대학교육의 사회교육과 국제교육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바란다.
- 대학평가를 하되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지표(예: 출석체크--- 한심한 작태임)로 대학을 평가하지 말라.
- 사학의부패와 전횡을 막는 진정한 법 개정을 통해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인 환경에서 인문적 정신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대학교육 개혁에 있어 인원감축에 대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인 듯 합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미래의 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학과를 중점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시켜야 할 분야에는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단순히 학과를 통합시키는 과정으로만은 치우치지 않았으면 한다.
- 공영형 사립대학 적극 추진해야함
- 대학원 자율권을 보장해 주세요. 잘하는 곳은 지원하되 못하는 곳은 자연도태되도록 시장의원리에 맡겨주세요.

- CK, Prime 등의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기 보다는 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학자율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2주기 평가를 통해 대학교육기관으로서 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대학으로 판명된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이 필요
- 정치와 이념 논리, 패권주의, 지역색으로 가는 촛뜨기 행위로 제발 가지말고, 국제화,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 고등교육은 교수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수 수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학 총장에게 지원금이 전달되면 건물 수나 주변 사업장만 번창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비전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며, 대학 서열화는 아주 많이 완화되어야 한다.
-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대학교육만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 기본소득 도입 등 경제적 평등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전환이 필요.
- 80% 사립대 비중을 공영형 사립대등을 통해 50%정도로 줄여 공익성 확대.
-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정책자문단 조직. 중장기 개혁프로그램 만들어야.
- 개혁은 단기적으로 실행하려면 실패. "
- 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립대/수도권 위주의 대학교육에서 사회책임/정부 책임형 대학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공적기능을 강화해야 함. 대학평가는 현 상황을 액면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대학교육 대상자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택받지 못한 비리 부실 대학의 경우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그 교육방식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함. 현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지원은 반대로 지역에서 대학교육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지역 사정에 맞도록 거점국립대학과 지역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상생의 기초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대학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보다는 취약한 대학이 자립하고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적인 평가잣대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지향하여, 취약한 대학들이 재정악화로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학문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

-
- 대학경영 능력없는 대학 수익용재산은 많은데 법정부담금 내지 않은 대학 등 대학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대학 경영 법인을 퇴출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함
- 민교협, 사교련, 국교협 등의 경로를 통해 대학교육 개혁에 관한 평교수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라.
- 대학평가에 재학률, 취업률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취업률
- 전인적 인간의 경쟁과 서열을 통해서 양성되는 것이 아니며, '머리', '가슴', '손' 중에서 '따듯한 가슴'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말아 주었으면 한다.
- 문명 전환의 시대에 맞는 대학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을 중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 생산 형태를 대학교육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대학이 정부나 기업의 통제에 예속되지 않고 본래의 자율적 교육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
- 교육부 내 적폐 청산
-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학경영총과 결탁되어 온갖 부조리와 비리를 양산한 교육부관료들의 인적청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 해체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 교육부의 탁상행정식 지원정책 개선 및 대학평가를 통한 서열화 철폐
- 기초학문 육성, 제대로 된 전임교수의 대폭 확충, 사학 비리의 척결, 교육부의 자기반성 등.
- 장기적으로 대학 서열화 폐지와 수도권 집중 해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 대학구조평가를 계기로 사립대에서 쉽게 폐과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소위 '장사'되는 학과만으로 편제가 되는 교육의 편향성이 미래 우리 사회를 크게 왜곡시키며, 대학을 졸업생이 시민의 자질을 갖추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폐과위주의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는 대학들에 대하여 평가를 함에 있어서 반영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부의 본래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서열화 완화와 비리사학 척결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평가에 근거한 통폐합이나 퇴출 등은 학교 스스로 할 것이다.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학개혁 정책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자동적인 급

격한 학령인구감소에 적응하는 대학이 되도록 해야한다. 나아가 대학교육 역시 공공의 교육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면 부실한 사학에 적극적인 대학 재정지원 정책(공약한 공영형 사립대학 같은)이 선행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교육은 졸업 후 현실과 미래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갖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최상의 정책은 대학 교육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사학 부패나 비리를 철저히 감사하고, 대학 평가의 핵심을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얼마나 순기능적으로 공헌 했는지를 평가 해야 한다.
- 사학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감독 강화 필요. 국공립대 네트워크화 조속 실현,
-
- 정책이 적용되려면 그 만큼의 정책 성공을 위한 절차가 있는 것이니 그 절차도 고민해야 한다.
-
-
- 학교비리근절
- 우리나라 대학들은 세계 우수 대학들에 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턱없이 많으며,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는 주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 재단들이 정량평가는 충족하고 인건비나 학교운영비용은 절감할 목적으로 비전임교원의 비정상적 확대, 학생의 진로나 학습권 및 전공의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학과 통폐합과 폐과 등을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라는 허울 아래 신진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만 잘못된 희생을 강요하고 착취를 당연시하는 적폐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및 비정규교수직의 철폐, 사학 재단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대학 개혁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더이상 대학 교육이 왜곡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육과 학문이 발전하는 필요조건입니다.
- 정부재정지원확대
- 비정규직 철폐! 사학재벌 눈치 보지 말고 과감히 개혁하고 지원해야 함!
- 서울외 지방대학교의 지원(국립대 사립대)을 서울권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길바란다
- 기초 인문 학과들이 완전히 사라질 지경입니다. 학문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문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주

시기를 바랍니다.

- 100% 대학 자율화
- 외부 기관을 이용한 학내 교육, 행정 등에 대한 평가 및 감사 기관 운영 필요
- 시간강사 처우와 고용안정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이 담보되는 대학이어야 함.
- 공립, 사립 모든 대학을 단기간에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차원에서 국립대학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난 후 중장기 계획으로 대학의 균형에 대해 고민해주시길 바람.
- 시간강사가 안정적으로 연구와 강의에 전념할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연구강의 교수제 도입이 필요해보인다
- 제발 인간을 위한, 대학 그 자체의 본연의 기능을 위한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 국내 대학이 수준 낮은 연구성과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논문은 그리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분석에만 1년 이상 소요되고 논문의 작성에도 시간이 필요하며, 심지어는 논문을 완성한 상태에서 학술지 게재절차에만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위 기간들은 질 좋은 논문일수록 당연히 더 길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지원사업에서는 1년 내에 성과를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자료만 취하고 졸속으로 연구하여 서류상 요건만 채우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외 사례를 살펴봐도 깊이 있는 연구들은 수년이상 지속된 연구 끝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 연구비를 균등하게 배분한 후 수년 뒤에 성과를 내지 못한 교수를 문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대학 내 시간강사들의 생존권 보장!
- 사학법을 개정하여 사학비리와 부태를 척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구조개혁 방안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대학문화 개혁이 절대 필요하며, 논문 위주 교수채용 및 평가를 지양해야한다고 사려됨.
- 대학교수들이 연구, 강의,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적평가를 지양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
- 사립교육기관들의 국공립교육기관으로의 점진적 통합
- 저는 20년째 시간강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학만 겪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

라도 가장 심한 차이를 보이는 직업군입니다. 교수를 정규직으로, 강사를 비정규직으로 본다면 급여, 연금,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교수와 시간강사의 임금차이가 최대 30배에 이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조의 문제로 치부하고 눈감을 수 있는지. 바른 소리에서 빠지지 않는 교수들도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안 하지요. 대학은 강사 착취하는 것으로 운영되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대학을 대학답게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게!
- 대학구조조정 정책 전면 개편 필요
- "대학 역시 작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이며 헌법의 기초가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 가장 약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대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보다 훌륭한 대학 환경을 위해 정규직 교수의 수업 양의 증가(평가지표라고 합니다.) 때문에 비정규직 교수들이 내몰리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
- 비정규교수의 직급 및 강의로 안정성 확립
-
-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다.
-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강화된 대학교육적폐의 핵심인 대학구조개혁평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검토하며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당정청이 잘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강사법 등 악법을 폐기하고 올바른 법 제정을 위해 당정청이 국가교육회의 의제설정과 국회 상임위내 특위 설치 등을 주도해 주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학이 민주주의 공간이 되도록 대학 내외 구성원 적절한 권한 배분과 제왕적 이사회 및 제왕적 총장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규모 민주적 평의회 구성 등 제도화에 대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이 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 해결해야 합니다.
- 우선 학생들을입시전쟁에서 해방 시키고, 교수들의 연구환경부터 조성해줄것!
- 신자유주의식 양적 연구 강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지성의 공간 사유의 공간으로 대학의 기능 회복을 우선시 하길
- 통제식, 서열식보다는 특성화 쪽으로 하는 것이
- "이공계의 지원도 변화되어가는 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하지만, 눈앞의 실리만을 보고

인문대를 축소하지말고 높아지는 범죄율과 피폐해져가는 사회분위기 그리고 노령화사회에 맞추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문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또 대학내에 대학과 강사간의 큰 벽을 허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 똑같이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함에도 그 대우는 격차가 너무 심해 강사는 생활고로 고민해야하고, 그나마 강사자리라도 연명하기 위해 교수에게 다양한 갑질아닌 갑질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육의 상아탑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자율성인정, 인문대학의 지원확대, 강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
-
- 많은 것을 하기보다 누군가가 알고있는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겉으로 생색내는 변화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 대학에 자유와 자율성을 부여!
- 통계 위주의 과도한 양적 경쟁보다는 질적 경쟁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실적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어 학문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대학평가 기준이 곧 취업에 유리한 전공 과목만 융성하게 되었다. 앞으로인문학 예술이 부재된 우리사회는 비전이 없다
-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10여개 국립대 총장 부당 임명건을 당장 철회하고 대학 자율적으로 선출된 총장을 재임명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 자율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
- 현대사회에 맞는 경쟁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의 본질에 대한 고려 없이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초 학문과 인문사회과학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대학이 살아남습니다.
-
- "대학 성립의 기본 요건을 마지노 선으로 정하여 그것에 미달되는 대학만 재정지원 중지나 시한부 개선 명령을 하고, 나머지 대학은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자율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교육부는 대학교육을 선도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입장(대학과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망침)을 버리고 지원하고 보조하는 기능 및 지원에 대한 감사 등 사후 관리 철저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함.

- 고등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공감대 형성, 시간강사 문제해결
- 비영리기관답게 독점적인 이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대학의 대응책과 장기계획 수립, 공동논의, 지원
- 사학비리 적폐 청산
- 사학법 검토 및 개선 / 취업률 점수화 폐지 / 성적 상대평가 축소
-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회복
- 제발 정부가 교육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주세요.
- 몰라서 개혁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부디 책임 기간중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 주시길..
- 가장 큰 문제는 학벌에 따라 취업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소득차가 급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취업률이나 재학률로 평가되면 이런 체계를 더욱 확고해집니다. 취업률이나 재학률같이 말도 안되는 평가기준은 배제하고 소득이 적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만들어낸 대학을 높이 평가하는 제도가 되길 희망합니다.
- 대학운영에서 교육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함
- 뭐니해도 교육의 질 개선이 매우 중요하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대학에 자율성 부여 및 공영형 사립대학 같은 설익은 정책 시도 금지
- 구조개혁 폐지및 대학 자율성 확보
- "강사 처우 개선을 통한 국내 학문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문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대학원도 진학하고 그래야 기초 학문도 진흥됩니다. 그래야 학문의 정체성도 세워진다고 봅니다.
- 강사 문제가 단순히 강사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 대학의 자율성
- 대학 평가 내용 및 방법의 전환, 정부지원 사업에서의 각 대학의 규모, 구조 등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전략과 지원 방향 수립, 지방대학 존립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책 활성화
- 경쟁력 없는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 교육의 질 개선 : 전문대의 기능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여 학력의 고학력화를 방지 , 전임과 비전임의 차이를 극복하여 갑질문화를 청산... 등

- 사립왕국이 되어있는 비리대학만 척결하고 나머지대학은 시장경제에 의해 스스로 살아남게 할것
- 신자유주의 관료통제 일단멈춤, 전면 재검토, 의견수렴 충분히.
- "국공립대에서 총장 간선제가 실시된 이후로 본부가 평교수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본부의 교수임용권한을 강화하여 산학중점교수 등 비정상적인 교수임용이
- 이루어지는 등 각종 전횡을 일삼고 있다. 국공립대 본부의 부당한 대학규정 개정을 통한 권한강화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s://goo.gl/forms/7CVwXCmMzMhZbaEh2>